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1. 9.

금 융 위 원 회

1. 업무단위 추가등록 관련 [안 제19조제3항, 제19조의3, 제19조의4]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개정('21.6.8일)에 따라 위임된, 업무단위 추가등록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업무단위 추가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사한 업무의 투자매매·중개업의 종류 규정
 - 상이한 금융투자업 종류에 신규 진입할 경우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, 유사한 금융투자업무군내 업무추가시 등록제로 함
- 완화된 최저 자기자본 유지 요건은 해당 등록 업무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요건의 70%로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신규 사업 진출을 도모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형태 변경시 인가요건 면제·완화 [안 제19조의5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개정('21.6.8일)에 따라 위임된,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특례대상 조직형태 변경은 ‘지점→현지법인’, ‘현지법인→지점’, ‘지점→지점(본점 변경)’로 규정
- 외사가 발행주식총수를 100% 소유한 회사(완전자회사)를 국내 현지법인으로 규정
- 외사의 조직형태 변경시 사업계획 타당성, 인적·전산·물적설비 요건, 대주주 적격요건 적용을 면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형태 변경시 새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여 영업 활성화 도모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

[안 제73조, 제73조의2, 제73조의3, 제74조, 제75조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개정(“21.6.8일)에 따라 위임된,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위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발생 통보일 현재 예치기관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되, 동 예탁금이 온전히 예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비례 지급
- 예금보험금 지급에 앞서 예치기관이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, 투자자예탁금 지급액 산정, 지급절차·방법 등 지급과정 전반에 걸쳐, 예금보험공사 사전협의 의무화
- 부실관련자 범위 및 지급보류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,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·취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예치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예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,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4.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부담 완화 [안 제137조제1항]

가. 개정 이유

-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,
 - 결산서류 제출 관련하여서는 증권신고서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* 되어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
- * 일반공모 발행인은 증권 소유자수가 25인 미만이 될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면제

나. 개정 내용

-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과 관련한 기업 공시부담을 경감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최초 외감법인에 사업보고서 제출 1년 유예 [안 제167조제1항]

가. 개정 이유

- 현재 최초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은 사업보고서 필수서류인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없음*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법규와 현실이 불일치

*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는 필수 첨부서류이나(자본법 시행령 §168⑥1), 외감법은 감사절차를 감안하여 최초 외감법인에 대해 1년간 준비기간 부여

나. 개정 내용

-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의 경우, 외부감사 절차를 감안하여 당해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다음해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선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를 명확히 정비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6. 분기보고서 작성부담 경감 [안 제170조제3항]

가. 개정 이유

- 현재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 및 작성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,
 -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(연간기준)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
 - 분기보고서는 보고대상기간이 짧아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(연간기준) 중 변동이 없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고,
 - 제출기한이 사업보고서의 절반(45일)에 불과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공시부담이 상당히 큰 편

나. 개정 내용

-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(재무사항, 사업내용 등)만 기재하고 기타항목*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개선

* 임원의 현황,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,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분기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기업공시 부담을 경감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[안 제171조제1항]

가. 개정 이유

-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아* 투자자 보호에 한계

*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사채로서 그 성격이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하나, 조건부자본증권과 달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

** '12년 이후 영구채가 지속 발행되고 있으며, 매년 2조원 정도 조기상환 발생

나. 개정 내용

-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(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)토록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조건부 자본증권(현재 주요사항보고 대상)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영구채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8.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관련 대상업무[안 제276조제1항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개정('21.6.8일)에 따라 위임된,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대상 업무에 대하여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'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이와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'로 구체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투자신탁 등 업무의 위탁수행시에도 금번 개정에 따른 등록을 통해 적정규율*을 받게되어 펀드업무 투명성·안정성 제고

*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시 직무 관련 정보이용 금지 등 영업규제 적용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9. 단기금융업 본인 요건 마련[안 제348조제5항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개정('21.6.8일)에 따라 위임된, 단기금융회사의 본인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본인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에 대하여 구체화함

- ① 건전한 재무상태 : 경영건전성 기준(법 §31) 충족 필요**

 - 자기자본비율, 자산 건전성, 유동성, 위험관리, 외환건전성 등

② 사회적 신용요건 관련 다음 사실이 없을 것(다만,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제외) :

 -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, 금융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 취소
 -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사처벌(양벌규정에 따른 경우 제외), 신용질서 저해(채무불이행 등), 업무전부정지처분
 - 최근 2년간 업무일부정지처분, 최근 1년간 지점, 영업소 폐쇄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단기금융업자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수준의 본인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을 요구함으로써, 회사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0. 5%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[안 제379조제4항 단서]

가. 개정 이유

- 5% 보고의무* 위반시 과징금이 다른 공시위반시 과징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*

- 이에 지분공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 등이 지속 제기

※ 투자자는 ①상장사 주식등을 5%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②1% 이상 지분 변동 또는 ③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·공시

* [과징금 평균 부과금액(최근3년)] 5%보고 : 37만원,
증권신고서 : 5.8천만원, 주요사항보고서 : 1.6천만원, 정기보고서 : 8.1천만원

나. 개정 내용

- 5%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(1,000억원 미만)에 대해서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(1,000억원)을 적용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5% 보고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,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11.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개선 [안 제384조제8항]

가. 개정 이유

- 불공정거래 등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금감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,
 - 신고로 적발된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되므로 신고 포상금도 국고에서 지급될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금융위가 정부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포상금 제도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개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12. 소액공모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[시행령 별표22]

가. 개정 이유

-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(과태료)은 증권신고서 미제출(과징금)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임에도 실제 제재금액이 보다 많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금액을 조정(6천만원 → 3천만원*)하여 제재의 적합성을 개선

* 10억원 모집·매출시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수준의 과태료 부과 예상

- 아울러,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상한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제재의 적합성을 개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